금융위원회 업무보고

2025. 12. 19.

Ⅰ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1 '25년 성과 및 보완점

[성과] 생산적 금융, 포용금융, 신뢰금융의 「금융 대전환」 기틀 마련

□ (생산적 금융) '부동산 → 첨단·혁신·벤처', '수도권 → 지방', '예금·대출 → 투자'로의 **자금흐름 전환**을 위한 **금융시스템의 혁신** 시작

❶ 대한민국 **20년 성장동력**을 준비하기 위한 **국민성장펀드 150조원**, **국가균형발전**을 위한 **지방공급 확대 목표제*** 마련

* (국민성장펀드, 9.10) 12.10일 국민성장펀드 출범, 제1호 프로젝트 후보군 검토
(지방우대금융, 10.22) 정책금융 지방비중 45%로 확대, 지방조직 강화 등

❷ **은행 자본규제 개선**(RWA), **대형IB**(종합금융투자사업자) **지정** 등 **생산적 분야**로의 **금융회사**의 **자금공급 촉진**을 위한 **규제·감독·인가** 개선*

* (은행 건전성규제, 9.19) 은행 비상장주식 투자 RWA 합리화(400%→250%) 등
(종투사 지정, 11.19) 발행어음·IMA 인가·지정 및 모험자본 25% 공급의무 부과

❸ **민간 금융권**도 **5년간 총 603조원+α 공급***을 발표하는 등 **적극 호응**

* 11월말 기준 생산적금융 525.5조원(국민성장펀드 투자 52조원), 포용금융 77.5조원

❹ 전인미답의 **코스피 4,000** 달성 등 **시장과 투자자의 기대**도 **긍정적**

□ (포용적 금융) 코로나19, 고금리 등으로 **위기**에 처한 **민생경제**의 **회복**을 위해 **신속**하고 **과감**한 **지원 조치**

❶ 상환능력을 상실한 국민은 **새도약기금***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**장기 연체채권**(7년, 5천만원 이하)을 **일괄매입·심사**하여 **소각** 또는 **채무조정**

* 새도약기금 출범 2개월만에 1.1조원, 약 7만여명 연체채권 1차 소각(12.8)

❷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**소상공인**은 **새출발기금** 채무조정 **지원** 폭을 확대

❸ **성실상환자**는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**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** 추진*

* 개인 255.6만명, 개인사업자 30.6만명 등 286.2만명에 대해 지원조치 완료('25.11말 기준)

❹ 2개월간 **총 12차례 현장간담회** 개최를 통해 **소상공인 지원방안** 마련

- 가장 수요가 많았던 **성실상환자 지원**을 위해 **10조원+α 특별 자금 공급**, **금리경감 3종 세트***, **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** 등 발표

*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, 금리인하요구 활성화,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 상호금융 확대

□ **(신뢰받는 금융) 가계부채** 등 **리스크 요인**을 **적극 관리**하는 한편, 공정한 **시장질서** 및 **금융보안체계** 확립에도 노력

❶ '**실수요 아닌 대출**'을 **차단**한 **6.27 대책** 등 **가계부채** 증가에 기민하게 **대처**하고 **정책·민간금융**으로 **관세위기**에 적극 **대응**

❷ **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** 신설 및 **1호·2호 적발***, **과징금 부과기준 상향** 및 **개인기반 감시체계 가동** 등 **불공정거래 '원스트라이크 아웃'** 실행

* (1호) 슈퍼리치 1천억원 규모 시세조종 / (2호) 금융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선행매매

❸ **금융권 정보유출사태**에 대응하여 **소비자 보호조치**를 면밀히 관리·감독하고 **징벌적 과징금 도입** 등 **재발방지 방안** 강구

❹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을 통해 차단하는 **보이스피싱 정보공유·분석 AI플랫폼**(ASAP) 구축

[보완] 대전환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화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

❶ **생산적 금융**의 **본격적인 성과 창출**을 위해 정책금융 자금공급, 금융권 소통 등 **집행과 관리에 만전**을 기할 필요

❷ 채무 소각 등 **단기적 조치**에 이어 **근본적**인 **금융소외자**의 **어려움**을 **해소**하기 위한 **추심·고금리** 등 **구조적 문제 개혁** 필요

❸ **금융시장 안정**, **자본시장 질서 확립**, **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**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필요

2 향후 업무추진방향

◆ 생산적 금융, 포용적 금융, 신뢰받는 금융의 「3대 大전환」 가속화

- '25년은 새정부 금융정책의 기반 마련 및 시급한 민생 회복에 집중
- 현장과 속도의 금융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

□ [생산적 금융] '25년 추진체계 마련 → '26년부터 성과 창출 가시화

국민성장펀드	지방 자금공급	민간 금융회사	자본시장
거버넌스·기틀 마련	정책금융 40% (100조원)	부동산 쏠림에 대한 변화 필요성 공감대	코스피 4천시대 개막
⬇	⬇	⬇	⬇
5년간 年 30조원, 지방 40% 자금공급	정책금융 45% (125조원)	5년간 525.5조원+α(11말) (3년간 모험자본 26.7조원)	확산 및 코스닥까지 연결 (시장질서, 투자유인, 주주가치)

□ [포용적 금융] '25년에는 장기 연체자 중심으로 긴급 지원조치
→ '26년부터 금융소외, 금리단층, 장기연체 등 금융 구조개혁 추진

금리소외	금리단층	장기연체
금융소외자가 고금리를 부담하는 구조	저신용자-고신용자 간 금리단층 제도권 금융의 높은 문턱	대부업체로 넘겨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
⬇	⬇	⬇
3~6% 서민금융 공급 대폭 확대 (금융회사 사회환원 제도화)	성실상환시 제도권 금융 안착 (크레딧-빌드업) 금융회사 중금리 대출 확대	연체채권 장기·과잉 추심관행 근절 신속 재기 위한 채무조정 내실화

□ [신뢰 금융] 금융안정, 해킹·범죄 대응, 소비자 보호는 일관되게 추진

❶ 가계부채, 부동산PF, 산업리스크 등 리스크 요인은 흔들림없이 관리

❷ 해킹, 불법사금융,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와 금융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여 제도적 대응·예방 장치 마련

❸ 국민 생활 체감형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홍보

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
「금융 대전환」

✓ 생산적 금융, 포용적 금융,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 가속화
✓ 현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

3대 방향 12대 과제

1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

첨단산업 지원 정책금융 선도	• **국민성장펀드** 가동 개시 및 **국민참여형** 펀드 조성 • 정책금융 **공급 효율화**
지역·기후·소상공인 지속가능 경제	• **정책금융** 지방공급 및 기후금융 **단계적 확대** • **지방우대 금융** 확대 및 소상공인 금융체계 개편
금융회사 생산적금융 경쟁력 강화	• **정부-금융권 협의체** 생산적 금융 강화방안 모색 • 全업권 **규제합리화** • **모험자본** 공급 확대
코스피 4,000시대 흐름 연결·확산	• **코스닥** 역동성(多産多死) 및 투자자 보호 강화 • 세제·규제 개선을 통한 **우리 증시 투자유인** 제고

2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

금융소외자 금리인하	• **청년** 및 **사회적 배려대상자** 저금리(**4.5%**) 대출 신설 • **금융배제계층** 금리부담 대폭 완화(**5~6.3%**)
중·저신용자 은행 접근성 제고	• **정책서민금융 → 은행 대출**로의 **크레딧 빌드업** • **중금리** 대출 등 금융회사 자체 서민금융 강화
연체자 재기 지원	• **장기·과잉 추심 관행 근절** •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**상시 채무조정** 내실화
국민 금융역량 제고	• **세대 맞춤형 금융상품** 제공 및 **금융교육** 강화

3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

흔들림 없는 금융 안정	• 일관된 **가계부채** 관리 • **부동산PF** 연착륙 지속 • 선제적 **유동성** 지원 및 효과적 **부실금융회사 정리**
자본시장 질서 확립	• **주가조작 예방·감시** 체계 강화 및 **제재절차** 개선 • 자사주·합병·분할·공시 제도개선 등 **일반주주 보호** 강화
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	• **해킹사고 예방** 훈련 및 **과징금** 강화 • **불법사금융·보이스피싱·초국경범죄·자금세탁** 근절
국민 생활체감형 정책	• **치매보험** 활성화, **실손보험** 개편 • **AI Agent** 도입

Ⅱ. 중점 추진과제

1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(국정과제 46·47·48·59)

1.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 본격화

□ **'25년 국민성장펀드**가 **출범**한 만큼 **'26년**부터 **150조원 공급 개시**[국정46]

❶ **'26년 1차 메가프로젝트**(7건잠정)를 시작으로 향후 **5년간 年30조원** 및 **지역**에 **40% 이상** 지원

- ①K-엔비디아 육성, ②국가 AI컴퓨팅 센터, ③재생에너지 발전, ④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, ⑤전력반도체 생산공장, ⑥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, ⑦반도체 에너지 인프라

※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에 부응하여 적극 지원

❷ **미래 성장엔진**을 가려내는 **선구안**을 위해 **정부**와 **금융·산업계 최고 전문가**로 구성된 **거버넌스**(투심위-기금위)에서 투자 결정

❸ **첨단산업기업**과 **국민 자산**이 함께 성장하는 **국민참여형 펀드** 조성('26上)

□ 자금공급이 절실한 **첨단산업 지원효과 제고**를 위해 **정책금융 효율화**

❶ **정책금융협의회**, **정부-금융-산업계 협의** 등에서 발굴된 중점지원 분야에 **정책금융 집중 공급***

* 5대분야(첨단산업 육성, 유망산업 지원, 기존산업 재편, 유니콘 육성, 경영애로 해소) 중점 공급

❷ 공적보증을 **첨단·수출기업 중심**으로 제공하고, **장기·중복 보증축소**('26上)

□ **금융산업**도 **첨단산업화**에 동참하여 **AI 전환(AX)** 및 **디지털 혁신** 추진

❶ 금융 AX 확산을 위해 **결합절차 간소화** 등 **데이터 결합·활용** 지원('26上)[국정46] 및 AI 학습·개발용 **금융공공데이터 개방**('26.4Q)

❷ **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**을 위해 **스테이블코인 규율**을 **포함**하여 **사업자-시장-이용자**를 아우르는 **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 마련**[국정48]

2.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, 탄소감축,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

□ **지방우대정책**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**정책·민간금융**의 **지역금융 확대**

❶ **지역 정책금융**을 **'25년 40%·年100조원**에서 **'28년 45%·年125조원**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**지방전용펀드 年2.5조원** 규모 조성

❷ **지방**을 **우대**하는 **규제 개선**과 **신규 지역상품 출시 유도**를 통해 **30%**에 머물고 있는 **은행**의 **지역금융**을 지속 확대*

* ❶ (규제)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: (예) 기업(85%→80%), 개인사업자(100%→95%)
❷ (상품) 지방은행-인터넷은행 공동대출을 개인 → 중소기업·개인사업자 등 확대('26下)

❸ **북극항로 개척**을 준비하고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**동남권투자공사 신설** 추진 [국정46]

□ **탄소감축목표** 달성을 위한 **기후금융 확대** 및 **ESG 인프라 구축**[국정46]

❶ '25.11월 설정된 **'35년 NDC***와 연계해 **현행 年60조원** 수준인 **정책 기후금융 공급**을 5년에 걸쳐 **年80조원 이상**으로 점진적 **확대 추진**

*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: '18년 대비 '30년까지 △40% → '35년까지 △53~61%

❷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**탄소감축**을 지원하는 **한국형 전환금융 도입**('26.1Q)

❸ 국제적 정합성, 기업의 수용성, 정보 유용성을 종합 고려하여 **ESG 공시 기준·로드맵** 마련, **이행지원** 및 **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개선**('26.1Q)

□ 긴급한 자금지원에 이어, **소상공인 금융공급체계 전반**을 **개선**[국정59]

❶ **소상공인의 성장성·안정성**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**비금융정보** 활용 **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**을 개발하고, **소상공인 통합 정보센터 구축**('26上)

❷ 은행권의 **공급망 금융** 관련 **신규 상품 및 플랫폼서비스 확대·활성화***('26.1Q)

* ❶ (신규상품) (예) 판매단계 이전 발주서 보유 기업 운전자금 대출상품 등
❷ (플랫폼서비스) (예) 은행 운영 플랫폼 내 관련 매출채권 유동화 상품 제공 등

❸ **금융·상거래·공공 정보**를 **한 번**에 보여주는 **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** 도입('26上)

3. 정부-금융권 「생산적 금융 협의체」를 통해 금융시스템 변화 추진

□ **정부-금융권**이 **긴밀히 소통**하여 **생산적 금융 경쟁력 강화**[국정46]

❶ **(협의체) 정기적 협의체**를 개최하여 **민간 금융권**의 생산적 금융 **추진 상황**을 **점검**하고 **경쟁력 강화방안** 모색

❷ **(규제합리화) 민·관 실무T/F**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호소하는 생산적 금융의 **장애요인 해소**를 위한 **全업권 규제합리화** 추진

- **(은행·보험*) 건전성규제 개선과제 발굴·추진**을 지속('26.1Q)

* (은행) 주식·펀드 자본규제 완화 시행 및 환율변동·규제비용 대응여력 확대 방안 검토
(보험) 펀드·인프라 투자 자본규제 완화, 보험사의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지원 등

- **(저축은행·상호금융*) 부동산 대출 규제** 강화, **지역·기업·서민 금융** 유도

* (저축은행) 부동산PF 자본규제 강화, 주식·펀드 보유규제 합리화, 중견기업·지역 대출 유도 등
(상호금융) 고위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, 중금리대출 관련 예대율 규제 완화

□ **증권사**는 **모험자본 특화** 금융회사로 **육성**하고 **투자은행(IB) 역할 강화**

❶ **대형 증권사**(종합금융투자사업자) **신규인가** 추진 및 **모험자본 공급 의무 제도화**에 따라 **이행 점검** 및 **사례 공유**를 통해 **실질적 성과*** **확산**[국정46]

* 현행 대비 '28말기준 약 26.7조원 모험자본 증가 예상 → 민·관협의체를 통해 점검

❷ **중·소형 증권사**는 **중소기업특화 증권사**(현재 8개사)에 대한 **인센티브 개선** 등을 통해 중소기업·벤처 지원 역량 강화('26下)

□ **단기적 수익 추구**에 매몰되지 않고 **기업성장**을 지원하는 **펀드 육성**

○ BDC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)의 **신속한 시장 안착***[국정46], **사모펀드**(PEF) **제도개선** 등 자산운용사의 **생산적 투자** 유도('26上)

* (BDC) 법 시행시 공모 종합운용사(42개사) 인가 간주, VC·신기사에 탄력적 인가정책 적용
(PEF) 업무집행사원 관리·감독 강화, PEF 운용 관련 투자자·정부 보고의무 확대 등

4. 코스피 4,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· 확산

□ **벤처·혁신기업** 요람인 **코스닥 신뢰+혁신 제고방안*** 추진('26上)[국정47]

* ❶ 코스닥본부의 독립성·자율성 제고를 통한 코스닥 시장의 자체혁신 지원
❷ 역동적 다산다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 재설계
❸ 연기금(평가), 집합투자기구(BDC 등 세제 지원)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여건 마련
❹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및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

□ **비상장·중소기업**도 자본시장에서 **원활히 자금**을 **조달**할 수 있도록 **지원**

❶ **토큰증권**(STO) 제도화(약 1년후 시행 예정)에 대비하여, 초기 벤처·혁신기업의 **새로운 자금조달 수단**으로 자리잡도록 **준비***[국정48]

*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·테스트, 공시·투자자보호 등 세부제도 설계 등

❷ **소액공모 범위** 확대, **모험자본 중개 플랫폼** 구축, **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** 진입 허용 등 비상장·중소기업의 **자본시장 진입장벽 완화**

* ❶ (소액공모) 現) 10억원 → 改) 30억원(예시)
❷ (플랫폼) 수요자(벤처·중소기업)-공급자(금투업계) 간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
❸ (전자등록기관) 예탁결제원 外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 전문기관 허가 추진

□ **투자자**의 **높은 기대**에 **부응**하여 **우리 증시**에 대한 **투자유인 제고**

❶ **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***에 세제혜택을 검토하여 **투자 촉진**은 물론 **재투자**로 이어지는 **선순환** 유도

*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, 코스닥 벤처펀드, BDC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)

❷ "Korea Premium Weeks*" 신설, **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**('26.5) 등 **외국인 투자자**의 **접근성** 개선

* (Korea Premium Weeks) 자본시장 행사 집중개최 주간 신설로 정책 홍보 정례 채널 구축
(영문공시) 現) 자산 10조원 이상&외국인 지분율 5%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
→ 改)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

❸ **국내 ETF 시장**의 **경쟁력 강화**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*('26下)

* ETF 상장·폐지요건 개선, 신상품 보호제도, 해외 ETF와의 규제차익 검토

2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(국정과제 59·81·82)

1.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(3~6%)로 정책서민금융 제공

□ **저금리 서민금융**을 확대해 **금융소외자**가 **고금리**를 **부담**하는 구조 해소
: **청년·사회적 배려 대상자 저금리대출 신설** 및 기존상품 **공급 확대**

❶ 고졸자·미취업자 등 **청년**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(학원비, 창업 준비금 등)을 지원하는 **4.5% 미소금융 청년상품*** **시범 도입** 후 확대 검토('26.1Q)

* 상품(안) : (금리) 연 4.5% (한도) 최대 500만원 (만기) 5년 / 5년간 1,500억원 공급

❷ **사회적 배려 대상자**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및 **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** 등을 위한 **4.5%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*** 신설('26.1Q)

* 상품(안) : (금리) 연 4.5% (한도) 최대 500만원 (만기) 5년 / 5년간 5천억원 공급

❸ **채무조정 성실 이행자**를 위한 **3~4% 소액대출*** **규모**를 **3배 이상 확대**하고, **지원 대상**도 확장('26.2Q)

* (성실상환자 대출)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/ 연 3~4% 금리, 최대 1,500만원
(공급량) 現) 연 1,200억원 → ('26년~) 연 4,200억원(+3,000억원)
(지원대상) 現) 신복위 채무조정, 개인회생 → 改) 기존 +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

❹ **금융배제계층**(연체자, 무소득자 등)도 받을 수 있는 **불법사금융예방대출**(年 2천억원 공급)의 **금리부담**을 **5~6%대**로 **대폭 완화**('26.1Q)

- '26년부터 **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페이백**(총이자 50%)을 **신설**해 금리 부담을 **6.3%**로 완화하고, **사회적 배려대상자**는 **5%대 추가 인하** 추진

□ **금융회사**의 **사회 환원**을 **제도화**하여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[국정59]

❶ 은행 등 금융권의 **출연규모**를 **대폭 확대**(年4,348억원 → 年6,321억원, '26년~) 하여 햇살론 금리 인하

❷ 금융권·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**법정기금**인 **서민금융안정기금**을 신설('27년)하여 **정책서민금융상품**을 **안정적·탄력적**으로 공급

2.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강화해 중·저신용자 제도권 금융접근성 제고

□ **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**시 **제도권 금융**에 **안착**하여 **자활**하는 체계 구축
: 정책-민간 연계 **크레딧 빌드업**(Credit Build-up)

❶ **불사금 대출** 완제시 **미소금융**(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) **이용**을 **지원**하여 **금리**↓step-down(6.3%→4.5%)·**한도**↑step-up(100→500만원)

❷ **미소금융** 완제 또는 성실상환시 **은행권 신용대출**인 **징검다리론**stepping stone을 이용할 수 있도록 **지원**하여 **정책서민금융 졸업** 유도

< "신용이 쌓이는" 크레딧 빌드업 체계 >

구분	금리인하불법사금융예방대출	➜	미소금융 신설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	➜	개편징검다리론(은행)
특징	연체자 등 **금융배제계층** 지원	금리↓ 한도↑	불법사금융예방대출 **완제자** 지원	제도권 금융	정책서민금융 **졸업**
금리	완제시 6.3%		연 4.5%		연 9% 內
한도	100만원		500만원		3,000만원

□ **금융회사 이익**으로 **중금리 대출 공급**을 확대하여 **금리단층 완화**[국정59]

❶ **은행 이익** 등 재원을 활용한 **중·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**('26.1Q)

*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 : ('25년) 3.5조원 → ('30년) 6.0조원 (+71.5%)

❷ **인터넷 전문은행**의 중·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**목표**를 현행 **30%**에서 **'30년 35% 이상**으로 **상향**

❸ **중·저신용자**도 **합리적 수준의 금리**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**중금리 제도개선*** 및 **운영행태 점검**

* (예) 개인사업자 대상 사잇돌대출 출시 검토, 민간중금리 취급시 인센티브 확대 등

□ **금융이력 부족계층**이 빠르게 신용을 쌓을 수 있게 **'숨은 신용점수' 발굴**

○ **공공기관 보유 대안정보**(건보료 납부정보 등)를 **집중·활용**하는 **대안정보센터** 구축(신정원) 및 **신용성장계좌***(ABC:Account for Better Credit) 도입('26下)

* CB사에 개인단위 정보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대안정보를 축적하고 신용평가에 활용
→ 중금리대출 금리 우대, 신용카드 발급요건 완화 등 혜택 부여

3. 연체채권의 장기·과잉 추심관행 근절 및 신속한 재기 지원

□ 연체채권의 **장기·과잉 추심관행**을 **제도적으로 방지**하는 관리체계 구축

❶ 금융회사의 **매입채권추심업**을 **허가제로 전환**하여 **금융회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체 등에 매각**됨에 따른 **과도한 채권추심 부담 완화**('26下)

❷ 금융회사 **채권매각 규제 강화, 소멸시효 연장 유인 억제***('26.1Q)

* (채권 매각) 원채권자에 고객 보호책임 부여, 보고·공시의무 부여
(소멸시효) 시효 도래시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, 연체채권은 시효완성 전제로 손비 인정

❸ **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연체채권 캠코 일원화**(매각·관리) **관리 강화**를 통해 **경쟁적 추심 방지** 등 개인 연체자의 원활한 재기 지원('26下)

□ 1회성 사면·소각*에 그치지 않고 **상시 채무조정제도 내실화**[국정59]

* 신용사면('25.9월) 및 새도약기금('25.10월)

❶ **새출발기금** 채무조정 후 **성실상환** 소상공인에 대한 **인센티브** 신설('26上)

* (예) 조기상환하거나 성실상환시 채무잔액 추가감면 또는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 신설

❷ 신용회복위원회 **취약계층 특례 채무조정 지원 대상** 확대('26.1월)

* 기초수급자 등 취약차주가 3년간 채무의 5%를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 면책
→ 지원대상 확대 (現 1,500만원 이하→ 改 5,000만원 이하)

❸ **금융회사**가 **자체 채무조정**에 **적극 참여**토록 **유인체계 구축***('26.1Q)

* (예) 채무조정실적 공시시스템 구축 및 신설되는 은행 포용금융 평가에 실적 반영

□ **"재기 지원 카드상품" 신설**(금융권 재원)로 **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**

❶ **채무조정** 등 **저신용자**를 대상으로 **후불교통**기능(월 10만원 한도)이 부여된 **체크카드**를 출시하고, 상환이력에 따라 한도상향('26.1Q)

❷ 카드사 재원을 바탕으로 **중·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 햇살론 카드 발급**('26.1Q)

* 月 300~500만원 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

4. 세대별 든든한 자산형성, 지방까지 촘촘한 금융생태계

□ 청년과 노년세대에 **맞춤형 자산형성 상품 제공**[국정82]

❶ 청년 납입 금액에 대해 **정부기여금***을 **지원**하고 **중소기업** 재직자·**소상공인**에 **우대혜택**을 제공하는 **비과세 "청년미래적금"** 출시('26.6월)

* 일반형 6%·우대형 12% → '26년 320만명 지원 추진 / 만기3년, 월납입한도 50만원

❷ **고령층**의 **안정적 노후생활 지원**을 위한 **주택연금 개선** 추진*('26.1Q)

* 초저가주택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, 인구감소지역 귀농·귀촌에 대한 실거주요건 완화 등

□ **정규교과 내 금융교육**과 **청년 재무상담** 본격 시행[국정82]

❶ **고등학교 정규 선택과목**으로 '**금융과 경제생활**' 과목을 도입하고, 청년·중년·노년 등 **생애 全주기 대상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*** 강화

* (청소년) 고교 과목 도입, (청·장년) 자산형성·노후설계 교육, (노년) 금융사기·디지털금융 교육

❷ 청년이 건전한 금융습관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**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** 서비스 제공

□ 지방소외문제 해결을 위한 **지방 금융생태계 강화**

❶ **지자체**와 협업하여 **읍·면·동*** 대상 "**찾아가는 복합지원**"을 확대하고, 지역 특성을 반영한 **지역밀착형 복합지원** 서비스 제공

*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/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3,624개

❷ 지방 점포폐쇄에 대응하여 **은행**의 **점포폐쇄 절차 강화** 및 디지털 점포·**은행대리업*** 등 **대체수단 활성화** 추진[국정59]

*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에서 예금·대출 가입 가능 → '26上 시범운영

❸ **사회적 기업·마을기업**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**금융지원*** 확대('26~'30)[국정81]

* 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('25.12월) 및 보증규모 확대('25년 2,500억원 → '30년 3,500억원)

3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(국정과제 46·47·58·66)

1.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

□ **가계부채 안정화**를 위한 **일관된 관리기조** 유지[국정58]

❶ **대내·외 경제여건, 경상 성장률 전망** 등을 **고려한 가계부채 총량관리**(연중)

❷ DSR 중심*으로 **상환능력** 내에서 **대출**하는 **여신관리체계 고도화**(연중)

* DSR 적용대상 확대, 소득심사 강화방안 등 검토

❸ **주신보 출연요율 체계 개편**('26.4월)*, 고액 주담대 **자본적립 부담** 강화('26上) 등 **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**

* 現) 대출종류별(고정·변동금리 등) 부과 → 改) 대출금액별 부과

❹ **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** 등 규제 **우회 부동산 대출**에 대한 **全금융권 점검**을 **강화**하고 적발시 **대출회수, 신규 대출 제한** 등 엄정 조치

❺ **차주의 상환책임**을 **담보물**(주택 등)에 **한정**하는 **유한책임대출 가이드라인·인센티브 마련** 등을 통해 **금융권 상품 출시 지원**('26下)

□ **튼튼한 금융시장 안정**을 위한 **시장안정·위기대응 체계정비**

❶ **리스크 요인**을 면밀히 **점검**하고, 필요시 **시장안정조치 선제적 시행**

❷ **유동성 위기**를 겪는 금융회사를 **선제적으로 지원**하고, **부실금융회사**를 보다 **효과적**으로 **정리**하는 등 **금융 안정화 제도개선**('26下)

❸ **부동산PF 연착륙**을 지속 추진하고, **PF 구조**(低자본-高보증) **개선** 및 PF위기 **재발 방지**를 위한 **부동산PF 건전성규제 정비** 추진[국정58]

❹ **새마을금고 건전성**의 **안정적 관리**를 위해 **관계부처 협력 강화***

* 금융위-행안부 간 정보공유 확대, '동일기능-동일규제' 원칙에 따른 건전성 규제 정비, 금융위(금감원) 내 새마을금고 상시감시·감독·검사지원 인력 확충 등

2. 투자자가 공정 ·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

□ **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착근**을 위한 **예방-감시-제재 제도개선**[국정47]

❶ 상장법인의 **임원** 등 **내부자**의 **불공정거래 예방 장치 강화***

* ❶ 상장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의무화
❷ 업무수행과 무관하더라도 임원 중요전과(사기, 배임, 횡령 등)는 공시 의무화
❸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·현실화

❷ 중대 불공정거래 **신속 조사·신속 제재** 등 성과를 거둔 관계기관 합동 "**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**"은 **연장** 및 **제도화** 검토('26上)

❸ **피조치자 방어권** 합리화 등 제재절차의 **공정성·투명성** 개선('26下)

* ❶ (불공정거래) 포렌식 절차 및 고발·통보기준, 과징금 부과기준 등 체계 정비, 포상금 확대 등
❷ (회계부정) 제재예정 내용을 "알 권리", 회계기준 해석 차이를 "다툴 권리" 보장 확대 등
❸ (검사·제재) 형사/他행정제재 절차와 비교하여 "법치 원칙"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

□ **공정한 주주보호 원칙**을 바탕으로 **주주가치 제고 문화 확산**[국정47]

❶ **자기주식** 원칙적 소각 지원 및 공시 강화, **합병가액** 등의 공정성 제고, **쪼개기 상장**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**주주보호**를 위한 **제도개선**

❷ 투명한 **투자자 정보제공**을 위한 **주주총회 표결결과** 및 **임원 보수** 공시 강화('26上)

❸ **스튜어드십 코드 개정**을 통한 적용대상·범위 확대 및 이행점검 제도 안착 등 **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** 확산*

* (적용) 상장주식 → 주식·채권·대체투자, G(지배구조)고려 →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고려
(이행점검) 자산운용사부터 시작 → 연기금·PEF 등으로 확대

□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**일관된 회계·공시 원칙 확립**[국정66]

○ 조직 유형을 불문하고, 재무제표 **작성·외부감사·공시·감독** 전반에 걸쳐 **보편적인 기준·절차**를 마련하는 **회계기본법 제정** 검토('26~)

3.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·예방장치 마련

□ 빈발하는 **해킹사태 재발방지**를 위해 **법·제도·규제·감독 전면개편**

❶ **全업권 빈틈없는**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**가상자산사업자** 등을 포괄하는 **법 체계**(“**디지털금융안전법**” 제정) **마련**

❷ 해킹사고시 **징벌적 과징금**을 신속히 도입하고, 해킹 예방을 위한 **모의해킹 의무화** 및 해킹사고 대비 **금융권 정기합동 훈련** 실시

□ **불법사금융·보이스피싱·자금세탁 근절** 추진[국정66]

❶ **불법사금융·불법추심**에 대한 **초동대응** 및 **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**('26.1Q~)

- **한 번의 신고**로 불법추심 중단조치, 채무자대리인 선임, 불법추심 이용계좌 금융거래 중단 등 **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·지원체계 구축**

- **불법추심에 이용**된 **SNS계정** 연계 **전화번호 차단**, 불법추심 이용계좌 **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**(대포통장 의심계좌) 등 **동결** 추진

❷ **보이스피싱 근절**을 위해 금융회사 **무과실책임 법제화**, **대포통장 대응방안** 마련, **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공유정보 및 활용도 확대** 추진

❸ **마약, 도박** 등에 활용된 **범죄의심계좌**에 대한 **계좌정지** 제도 도입

❹ **초국경범죄, 가상자산 자금세탁** 등 新유형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* 강화

*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국제범죄조직 포함, AML제도 국제 정합성 제고, 트래블룰 확대 등

□ **사전예방-사후구제 체계**를 구축해 **금융 소비자**를 **철저히 보호**[국정66]

❶ **소비자**가 직접 **금융정책**을 **평가**하고 그 결과를 **투명**하게 **공개**('26~)

❷ **성과지표·보수** 등 **보상체계**를 개선*하여 **금융 소비자 중심 경영** 정착

* ❶ (핵심성과지표(KPI)) 무리한 고위험 상품 판매 유인 차단 등 단기실적주의 개선
❷ (성과보수) 임원 개별보수 공시, 성과보수 이연·조정 개선 및 환수제도 도입 검토 등

❸ 소액분쟁 **편면적 구속력** 및 한국형 **페어펀드** 도입 등 **피해구제** 강화

4.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·추진·홍보

□ **일상**의 **위험**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"**생활 체감형 보험**" 강화

❶ **잠겨 있는 치매머니**를 **체계적**으로 **관리**하고, **치매가정**의 **경제적 부담**을 덜 수 있도록 **보험상품·신탁** 활성화

* 치매환자의 자산: ('25년) 172조원[GDP대비 6.9%] → ('50년) 488조원[15.6%]

❷ 전국 **17개 지자체**와 소상공인·취약계층을 위한 **무료 상생보험*** 추진

* 풍수해보험, 화재보험, 신용보험, 기후보험, 상해보험 등 보험료 전액 지원

❸ **사망보험금**을 **생전 노후자금**으로 **활용**하는 **유동화 제도 확대*** 시행[국정46]

* 보험사 확대: 5개 대형사→ 全보험사, 요양시설 비용지원 등 서비스형 상품 출시

❹ **보험료 부담 경감**과 **보장의 공정성 강화**를 위한 **실손보험** 개편('26上)

* ❶ 중증·보편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5세대 실손을 출시
❷ 舊세대('13년 이전) 계약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특약 등 관리방안 추진

□ **AI·디지털 시대**에 걸맞는 **금융서비스 혁신**으로 국민 **편의 제고**

❶ **금리인하 요구, 저금리 대환대출 조회** 등 **소비자에게 유리**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**마이데이터 AI Agent** 도입('26下)

❷ **결제서비스 혁신을 유도**하고 이를 **소비자가 안전하게 향유**하도록 **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***('26~)

* 전자금융업의 진입부터 소비자보호·안전성확보 장치까지 전면 재검토

❸ **미성년자**도 **현금 없는 결제환경**을 누릴 수 있도록 **카드 이용 개선***

* ❶ 체크카드 발급연령(現 12세 이상) 제한 폐지(단, 부모 동의를 전제)
❷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(現 월5만원→잠정10만원)
❸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 제도화(現 혁신금융서비스)

❹ **유망한 혁신금융서비스**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**배타적 운영권**을 부여하고, **컨설팅·테스트비용**을 지원하는 등 **샌드박스 지원체계 개선**('26上)

□ 정책 추진 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**현장 소통을 확대**하는 한편, **정책별로 특성**을 고려하여 국민소통에 가장 적합한 **맞춤형 홍보 추진**